

환경기술인력 환경관리 실태조사

편집부

연합회는 최근 전국 회원사 72개사를 대상으로 '환경기술인력 양성 및 수요창출을 위한 설문조사' 및 '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'를 조사했다.(편집자 주)

환경기술인력 수요창출

환경기술인력 수요창출은 의무고용제 부활(93.1%)이 대안

대부분 배출업소에서 환경기술인이 보충되어야 한다(61.1%)고 답변하고, 인력확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제도적 요인으로 나타났다.

이로 인해 98년에 규제 완화된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도의 부활 찬성에 전체 응답사 93.1%에 달했으며, 이는 환경관리 인원 충원으로 전문적관리능력 필요성, 기업주의 환경의식 고취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.

특히 현 환경관리인들의 고용불안과 이직률로 기술축적의 어려움이 크고 이로 인해 환경관리의 어려움이 더해진다고 답변했다.

환경관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영자의 환경의식부족(23.3%), 환경전문담당자 부족(21.9%)순으로 조사됐다.

이어 시설투자 미흡(19.2%)과 일반직원들의 호응부족도 16.4%에 달해 주변여건 또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.

환경기술인력 확보시 어려운 점은 제도적 요인(35.5%)외에도 배출인력의 기술전문성 결여도(19.4%), 현장근무 조건의 부족(19.4%), 경영주의 의식부족(16.1%)등으로 조사됐다.

실제 법정 관리인 외에 자격취득자 채용은 대부분 안한다(68.1%)로 나타나, 환경기술인력이 부족해도 제도적 인원외에는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.

이것은 기업의 환경관리 전문가 수요창출은 의무고용제 부활이 가장 큰 대안이 되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이기도 했다.

이번 설문응답자 중에서 수질, 대기환경관리 자격증을 비롯한 환경관련 자격증 2개 이상 보유자들은 전체 91%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환경관련 자격증의 필요성도 인정됐다.

실제 응답사중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환경관리 능력은 큰 것으로 드러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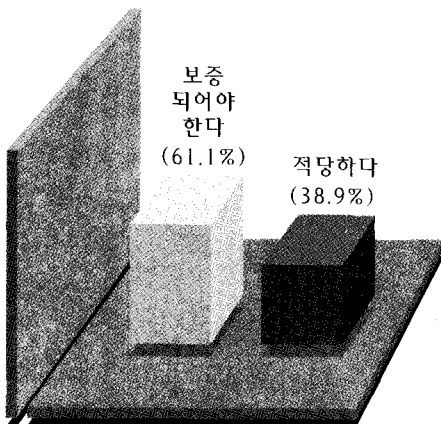
자격증 소지자가 능력있다(54.2%)를 답변한 회원사들은 문제발생시 이론적 접근이 가능·활용이 뛰어나며, 자신감 및 사명감이 높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. 그러나 자격증 따기 위한 이론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실무가 더 중요해 자격증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대답한 것도 12.5%로 현재 환경관련자격증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.

응답자 중 환경기술인력 수요창출방안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제도 부활이 무엇보다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는 압도적이었으며, 이와 함께 국가가 배출하는 환경기술인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전문기술능력 배양, 무분별한 환경기술인 공급확대 방지, 인력 고급화 유도, 실무중심 교육 등이 지적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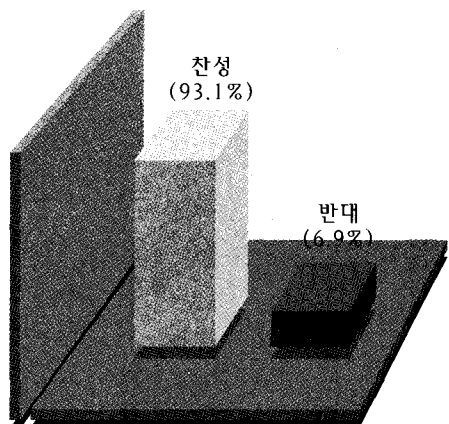
이와 함께 환경기술인들의 사명감과 더불어 책임감, 경영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법정 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.

결국 환경기술인력의 수요창출은 법정관리인 제도 부활과 함께 수요창출방안을 모색하고, 환경전문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

※ 환경관련 종사자 실태현황 (총72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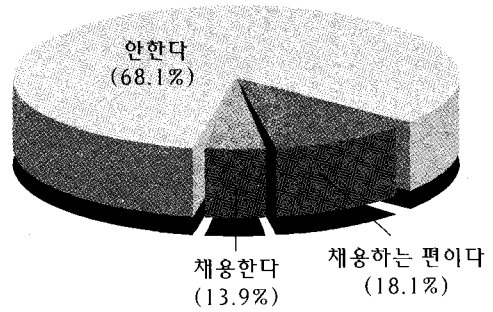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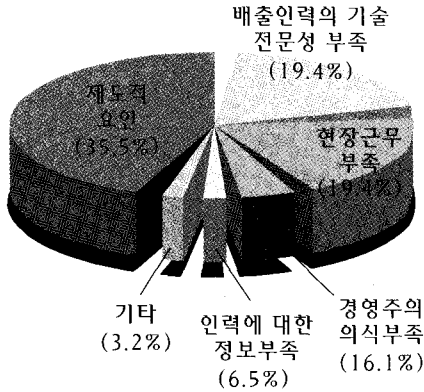


※ 환경관리인 의무 고용제 부활 찬·반 (총72명)



※ 환경기술인력 확보시 애로사항 (총62명)

※ 법정 관리인 외에 자격취득자 채용실태 (총72명)



환경관리 실태

찾은 지도단속·중복단속 가장 큰 애로

주체성 자율성을 상실한 환경관리 체계는 관할 기관의 지도단속이 적발위주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조사한 환경관리 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여러 기관 찾은 단속에 대한 불만이 59.7%로 나타났으며, 매우 불만족도 30.6%로 나타났다. 이와 함께 적발위주의 관리 감독이 기술지도 위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(51.4%)고 답하기도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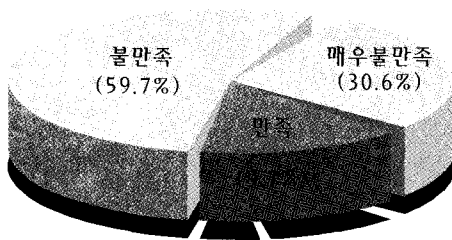
실제 전체 응답사 중 47.2%가 중앙정부, 지자체 등 2곳 이상으로부터 중복 단속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. 이외 합동단속, 민간단속 등 기타 기관의 지도단속도 8.3%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실제 년 10회 이상의 단속이 31.9%에 달하고 년 20회 이상도 8.3%로 나타났다.

분산 지도단속에 대한 애로사항 중 가장 큰 이유는 일관성 없는 기준, 중복 지도단속에 따른 인력낭비, 실적위주의 단속에 따른 부담감, 공무원 신분의 권위주의, 지도없는 단속, 전문성 없는 공무원의 단속 등을 지적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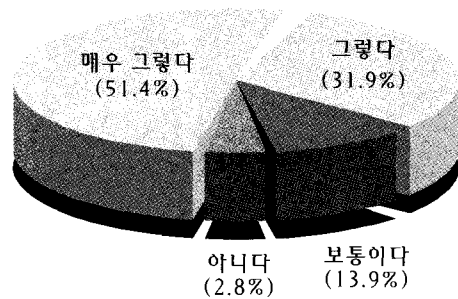
실제 단속적발 위주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는 감독기관의 권위주의적인 관행(36.4%), 실적위주로 이뤄지기 때문(30.5%), 행정력에 비해 많은 배출업체의 관리(19.5%)로 조사됐다. 이와 함께 배출업소의 소극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7.6%가 답해 환경관리인의 환경의식의 수준도 가늠케 했다.

연합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력 확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한편 이 설문 자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'환경기술인력 수급 및 육성'의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.

※ 분산 지도 단속기관에 대한 의견 (총72명)



※ 관리감독의 내용이 기술지도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(총72명)



※ 단속적발위주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? (총118명)

